

이산가족 상봉,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홍 순 직 · 이 용 화 / 현대경제연구원

이산가족 상봉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가치 및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당위적 사안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남북정상선언에서 방문단의 상호 교환에 합의함으로써 활성화되었으며, 당국 차원의 상봉 규모는 연평균 1,800여명에 달했다. 1985~2012년까지 총 6,128건의 25,278명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이중 당국 차원에서는 총 4,386건의 2만 1,891명이, 민간 차원에서는 총 1,742건의 3,387명이 상봉하였다. 하지만 2008년 이후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국과 민간 차원의 상봉이 모두 감소했다. 특히 당국 차원의 상봉은 2009~10년 2차례에 1,770여명만 성사되었고, 2008년과 2011~12년에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이산가족 상봉의 시급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당위성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매우 시급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이산가족의 연령 분포의 특성상, 고령층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전체가 50대 이상이며,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의 79.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3년과 비교할 때, 특히 80대의 비율이 약 21%p나 증가했다.

둘째, 사망률과 상봉률 격차 증가에 따라 상봉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2003년 이후 사망률은 매년 평균 2.9%인 반면 상봉률은 1.4%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사망자 수는 매년 평균 약 3,800명에 달한 반면 상봉자 수는 1,800명에 불과하여, 연간 2,000명에 달하는 이산가족들이 상봉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의 생존 기간이 10년 남짓 불과하여 상봉이 시급하다. 사망률과 상봉률 격차로 인해 현재의 이산가족은 20~24년 후에 모두 사망할 수 있으며, 평균 기대 잔여 수명에 기초한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12년 이내에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의 생존자들이 생애 한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매년 상봉 규모를 7,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매년 6,200명 이상 상봉이 이뤄져야만 이산의 한을 풀 수 있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상봉 시한이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명절이나 국가대사를 전후로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둘째, 사망률에 비해 상봉률이 낮고 고령화가 급속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상봉 인원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셋째, 대면 상봉과 함께 화상 상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상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영상편지 사업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개요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간 전쟁과 분단으로 헤어진 가족들 간의 만남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한편으로는 남북 관계 개선 및 통일에도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

시기별로 구분하면, 단기적으로는 나뉜 민족의 하나 됨은 물론 당국 간 대화를 통해 경색 국면의 남북관계 개선에도 큰 기여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중단된 당국 간 대화 재개의 물꼬를 여는 역할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2009년 추석맞이 이산가족 행사는 2차 핵실험 이후의 경색된 남북 간에 대화와 합의를 도출해낸 바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의 된 남북 관계 경색 완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 정부는 남북 간 신뢰회복을 위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적 통합은 물론, 통일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도 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갈등을 넘어 모두가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민족 평화와 화합을 위한 이벤트이므로 반드시 관철될 당위성이 있다.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에 대해 남북관계 전문가들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 역점 과제에서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들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현 정부 임기 내 시급한 해결 과제		2012.2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역점 과제		2012.8
이산가족상봉 문제해결	시급하다	81.9%	이산가족 문제해결		32.1%
	시급하지 않다	18.1%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시급하다	81.9%	사회·문화 교류 확대		35.7%
	시급하지 않다	18.1%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31.3%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마련	시급하다	42.3%	문화재·역사 유적 공동 발굴 추진		0.9%
	시급하지 않다	57.7%			

주 : 2012년 2월(72명)과 8월(112명)조사는 연구원, 교수 등 북한관련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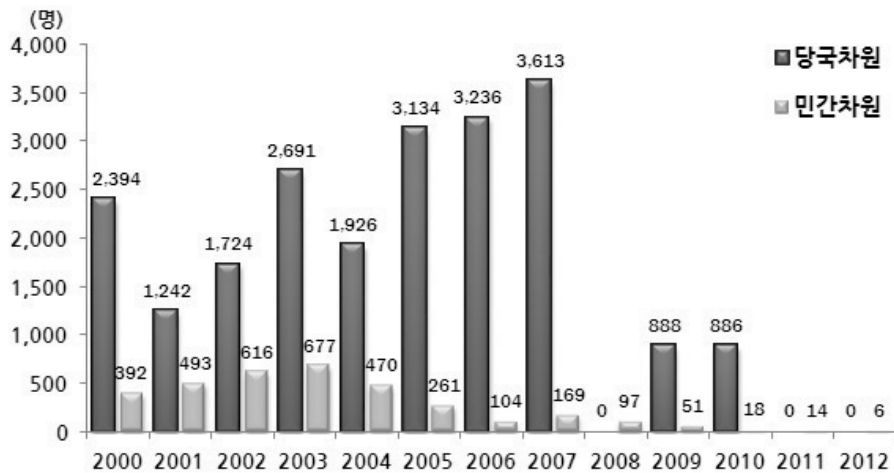
이산가족 상봉 추이

2000년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점차 활성화 되었으나, 2008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당국과 민간 차원에서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먼저 당국 차원에서는 2000년 이후, 지난 12년간 모두 18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교류가 이뤄졌으며 총 2만 1,734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한 바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되어, 해마다 2~3차례의 상봉 행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숫자는 해마다 꾸준한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9~10년 2차례에 1,770여명만 성사되었고, 2008년과 2011~12년에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한편, 민간 차원의 상봉도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0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년 14명의 상봉에 그쳤고, 2012년은 6명에 불과했다. 특히, 2008년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북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민간 차원에서의 이산가족 상봉도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국과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추이 비교 (200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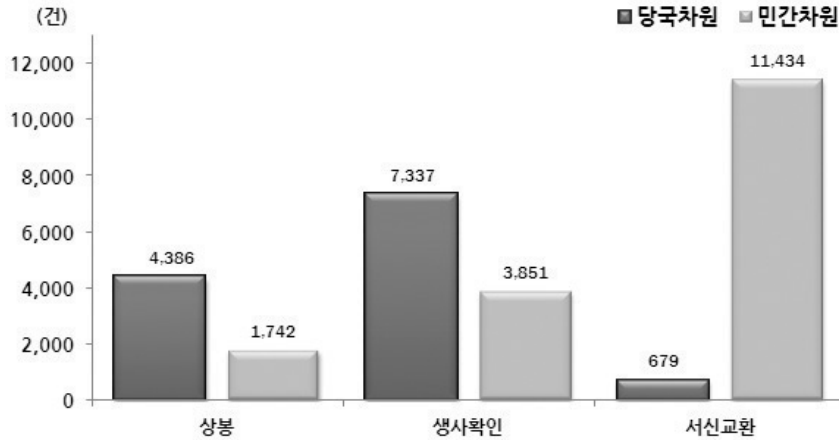
자료 : 통일부
 주 : 당국 차원의 상봉자 수는 화상상봉을 포함한 숫자임

특히 민간 차원에서는 제3국이라는 상봉 여건의 어려움으로 서신 교환의 형태로 주로 이뤄졌다. 특히 당국 차원에서는 교류 기회가 추첨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

이산가족 상봉,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에, 민간차원에서는 주로 서신 교환을 추진해 오고 있는 현실이다.

〈당국과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비교 (1985~2012)〉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한편 최근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기회 감소에 따라 제3국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뤄진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비용도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다. 특히 2005년 1인당 평균 425만원의 상봉 비용이 2011년에는 589만원으로 164만원(35.5%)이 증가하여,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 차원 이산가족상봉 소요 비용 (2005~2009)〉

(단위: 명 / 만원)

연 도	인원(건수)	1인당 평균 상봉 비용	평균 주선 사례비
2005	136명 (84)	425	180
2006	117명 (70)	465	184
2007	96명 (50)	418	174
2008	46명 (32)	539	220
2009	25명 (18)	589	257

자료 : 홍정욱 의원실

주 : 2010년 9월 국회 외교통산통일위원회 보고 내용이며,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자 254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임

이산가족 상봉 현황

이산가족 상봉은 당국과 민간 차원에서 동시에 이뤄져왔으며, 당국 차원의 교류가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건수로 살펴보면, 당국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2012년까지 대면 상봉과 화상 상봉을 합쳐 총 4,386건 성사되었으며, 2만 1,891명이 상봉하였다. 1985년에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 공연단 교환 실시로 총 65가족, 157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였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대면상봉은 총 3,829건(1만 8,143명)이 이뤄졌으며, 화상상봉은 2005년에 처음 시작되어 총 557건(3,748명)이 성사되었다. 민간차원의 상봉은 1990년부터 시작되어 총 1,739건(3,381명)이 성사되었으며 제3국에서의 상봉(98.0%)이 주로 이뤄졌다.

비중으로 보더라도 당국 차원에서의 상봉 비중이 민간 차원의 상봉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당국 차원의 상봉은 전체 상봉건수 가운데 71.6%를 차지하였으며, 반면 민간 차원의 상봉은 28.4%였다. 이는 민간 차원에서의 상봉이 대부분 소규모로 이뤄지는 데다가, 특히 북한 가족이 제3국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5년에 정부에 의해 도입된 화상 상봉은 총 3,748명의 이산가족의 상봉 기회를 제공하여, 이산가족 상봉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현황 (1985~2012)〉

구 분	당국 차원		민간 차원		합 계
	방북상봉	방남상봉	방북상봉	3국 상봉	
대면상봉	3,498건 (15,443명)	331건 (2,700명)	36건 (135명)	1,706건 (3,252명)	5,571건 (21,530명)
화상상봉	557건 (3,748명)		-		557건 (3,748명)
합 계	4,386건 (21,891명)		1,742건 (3,387명)		6,128건 (25,278명)
비중(%)	71.6%		28.4%		100%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 등록 현황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상봉 신청자 가운데 59.0%가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부터 등록을 시작하여 2012년 12월 말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총 12만 8,779명이며, 이중 5만 9,434명(41.9%)이 사망하였고, 7만 4,836명(58.1%)이 생존하고 있다.

〈연령별 이산가족 생존자 및 사망자 현황〉

구 분	90세 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 이하	계
생존자(명)	5,429	28,796	24,913	9,351	6,347	74,836
비율(%)	7.2	38.5	33.3	12.5	8.5	100
사망자(명)	22,808	23,184	6,985	803	163	53,943
비율(%)	42.3	43.0	12.9	1.5	0.3	100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주 : 사망자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 관계로 살펴보면 부부나 부모 혹은 자녀 관계에 있는 상봉 신청자가 46.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제나 자매는 약 41.3%, 3촌 이상은 1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가족 생존자 가족 관계〉

구 분	부부/부모/자녀	형제/자매/동생	3촌 이상	계
인원수(명)	34,815	30,902	9,119	74,836
비율(%)	46.5	41.3	12.2	100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상봉 신청자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황해도 출신이 23.4%로 가장 많았으며, 평안남도(13.1%), 함경남도(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 지역의 전체 35.3%를 차지하는 기타 지역 출신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월북 가족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산가족 생존자 출신지역 비율〉

구 분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	경기	강원	기타	계
인원수(명)	17,547	9,841	5,895	8,514	2,441	2,822	1,364	26,412	74,836
비율(%)	23.4	13.1	7.9	11.4	3.3	3.8	1.8	35.3	100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당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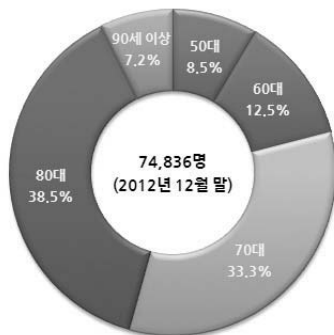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당위성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매우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첫째,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의 고령층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의 사망률과 상봉률의 격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의 생존 기간이 10년 남짓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산가족 고령층 급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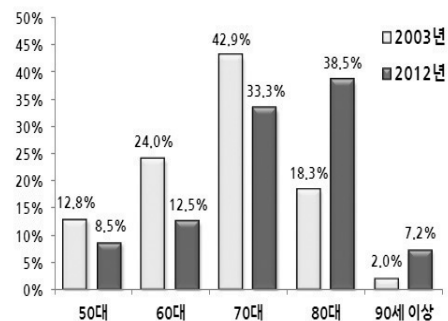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의 연령 분포상, 고령층의 비율이 높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 중 전체가 50대 이상이며,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 79.3%를 차지한다. 연령층별로는 80대(38.5%)와 70대(33.3%)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3년과 2012년을 비교해 보면, 70대 이상의 고령층은 약 16%p(63.2% → 79.0%) 증가하였으며, 특히 80대의 비율이 20.2%p(18.3% → 38.5%)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의 연령별 분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고령화 추이〉



이산가족 상봉,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사망률과 상봉률의 격차 증가

이산가족 사망자는 연간 약 3,800명에 달하며, 사망률과 상봉률 격차로 인해 상봉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은 연 2,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산가족 사망자의 비율은 증가하나, 상봉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매년 2,000명에 달하는 이산가족들이 상봉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있다. 2004년~2011년까지 사망률은 평균 2.9%로 사망자수가 연간 약 3,800명에 이르며, 현재까지의 누적 사망자 비율은 41.9%에 달한다. 반면, 이산가족 상봉률은 평균 1.4%로 상봉자는 연간 약 1,800명에 불과하며, 현재까지의 누적 상봉자 비율은 19.6%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상봉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이 매년 약 2,000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이산가족 사망자와 상봉 추이 비교 (2003~2012)〉

연도	사망자 (누계)(A)	생존자 (누계)	합계 (B)	연간 사망자	사망률 (누계)	상봉자		상봉률 (누계)
						연간	누계(C)	
2003년	19,488	103,397	122,885	-	15.9	3,368	10,406	8.5
2004년	23,058	100,861	123,919	3,570	18.6	2,396	12,802	10.3
2005년	26,945	96,268	123,213	3,887	21.9	3,395	16,197	13.1
2006년	28,997	94,933	123,930	2,052	23.4	3,341	19,538	15.8
2007년	33,300	93,487	126,787	4,303	26.3	3,782	23,320	18.4
2008년	38,926	88,417	127,343	5,626	30.6	97	23,417	18.4
2009년	42,123	85,905	128,028	3,197	32.9	939	24,356	19.0
2010년	43,990	84,133	128,123	1,867	34.3	904	25,260	19.7
2011년	49,776	78,892	128,668	5,786	38.7	14	25,274	19.6
2012년	53,943	74,836	128,779	4,167	41.9	6	25,280	19.6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 주 : 1) 이산가족의 전체 합계가 변동하는 이유는 미등록자의 등록이 추가로 이뤄지기 때문임
 2) 상봉자수는 당국 차원(화상상봉 포함)과 민간 차원의 상봉자를 합한 수치임
 3) 사망률(누계) = 연도별 사망자 누계(A) ÷ 합계(B) × 100
 4) 상봉률(누계) = 연도별 상봉자 누계(C) ÷ 합계(B) × 100

특히, 2008년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정체된 반면, 사망자 누적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9년의 경우, 민간차원에서 51명만이 상봉하였고, 2010년에는 추석맞이 당국과 민간 차원의 상봉을 포함해서 총 904명의 상봉이 이뤄졌다. 2008년~2012년 사이 이산가족의 사망자 비율은 15.6%p 증가한 반면, 상봉자 비율은 1.2%p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령자의 생존 기간이 10년 남짓 불과

현재의 이산가족은 평균사망률과 평균기대여명으로 보아 약 20~24년이면 모두 사망하고,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12년 내에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사망률로 추산해보면,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이산가족 사망자 수는 연간 약 3,800명으로, 생존자 7만 4,836명은 약 20년이 지나면 모두 사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산가족의 연도별 사망률이 2.9%이고 현재 생존율 58.1%를 감안하면, 향후 20년이 지나면 모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1년 생명표에 의하면, 세대별 평균기대여명은 50대가 28.6년, 60대는 20.0년이며, 70대는 12.4년, 80대는 6.6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0~60대의 평균 기대 여명은 약 24.3년이며, 70~80대는 9.5년으로 분석된다. 평균 기대여명을 토대로 추산하면, 현재 이산가족은 모두 50~60대 이상으로, 이들의 기대잔여수명이 24.3년임을 감안할 때 이산가족 당사자 대부분은 24년 이후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의 모든 이산가족 생존자들이 향후 생애 한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매년 상봉 규모를 7,000명 가까이 늘려야 하며,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10년간 매년 6,200명 이상 상봉해야 한다.

- ① 7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79.3%인 점과 70~80대의 평균 기대 여명이 9.5년임을 감안하면, 매년 6,220여 명씩 상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생존자 74,836명 × 고령자 비율 79.0%) / 9.5년 = 6,223.2명

이산가족 상봉,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② 한편 50~60대의 경우, 생존자 비율이 21.0%이고 평균 기대 여명이 24.3년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생전에 모두 상봉하기 위해서는 매년 647명씩 상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존자 74,836명 × 50~60대 비율 21.0%) / 24.3년 = 646.7명
- ③ 따라서 현재의 50대 이상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모두 생애 한번이라도 이산가족들과 상봉하기 위해서는 상봉 규모가 최소한 7,068명이 되어야 한다. (50~60대 상봉자 646.7명 + 70세 이상 고령자 6,223.2명 = 6,870명)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방안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상봉 시한이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명절이나 국가 대사를 전후하여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대북 수해지원 무산으로 인한 경색국면 지속에도 불구하고,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경색 국면 중에도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뤄진 바 있어 충분히 추진 가능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를 우선적으로 제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망자에 비해 상봉자수가 적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봉 인원을 최대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고령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생존 기간 내에 한번이라도 상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년 상봉 규모를 연간 7,000명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추천 방식의 당국 차원의 상봉을 '고령자 우선' 방식으로 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현실을 고려할 때 1회 상봉 시 대규모 상봉 추진은 불가능하므로, 상시 상봉에 대한 남북 간 합의와 이의 제도화 마련이 중요하다. 금강산의 이산가족면회소를 적극 활용하여, 남북 간의 정치적 현안에 상관없이 회담과 상봉의 정례화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대면 상봉과 함께 화상 상봉을 적극 활용하여 이산가족의 상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상 상봉의 경우, 북한 당국으로서도 대면 상봉보다 행사 준비를 위한 부담이 적으므로 합의 도출이 비교적 용이한 방법일 수 있다. 더욱이,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이 상당수임을 고려할 때, 화상 상봉 장소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직접 상봉의 어려움과 상봉의 장애물들을 고려하여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영상편지 사업을 상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경색 국면의 현 남북 관계 고려는 물론, 직접 상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영상편지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생사 확인조차 못한 이산가족이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영상편지 제작 사업 확대가 절실하다. 한편 기존의 상봉 가족에게도 고령 가족의 사망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의 상시화가 필수적이다. 統

〈보 론〉 이산가족 상봉자 및 생존자 비율 추정

- 생존율과 상봉률을 기초로 추정된 결과, 2033년에는 현재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이 모두 사망하여 절반 정도가 상봉하지 못한 채 사망할 우려
 - 2004년 이후 이산가족의 연평균 생존율이 2.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33년경에는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이 모두 사망할 것으로 예상
 - 연평균 상봉 비율은 약 1.4%p씩 증가하여 이산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2033년의 누적 상봉률은 49.0%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현재까지의 상봉 규모가 유지될 경우, 약 51.0%의 이산가족이 상봉을 못한 채 사망할 것으로 예상
 - 2015년경에는 이산가족 생존자 비율이 50%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산가족 상봉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임
 - 2009년 약 67%의 생존자 비율이 올해 안으로 약 59%로 감소하고, 2015년의 생존자의 비율은 약 50%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 연평균 사망자가 3,800여명임을 감안할 때, 2010년 상봉 규모(당국 차원)인 886명씩 매년 상봉할 경우에는, 연평균 약 3,00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망하게 됨

〈 이산가족 상봉자 및 생존자 비율 추정 〉

